

22-04 2022. 06. 29

# 현안과 과제

-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 목 차

---

## ■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의 주요 내용 .....	2
3. 북한의 재난 대응 및 지속가능 경제발전 모색 현황 .....	4
4.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	8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경제센터 : 이해정 연구위원 (02-2072-6226, hjlee@hri.co.kr)

강성현 선임연구원 (02-2072-6221, shkang@hri.co.kr)

## Executive Summary

### □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 ■ 개 요

지난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하면서 분야별 6개의 국정목표와 이와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제시하였다. 통일·외교·국방정책 추진 목표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정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18번째 약속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를 내세웠다. 여기에 국정과제 93번(북한 비핵화 추진), 94번(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95번(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이 포함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 94번에 포함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살피고자 한다.

#### ■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의 주요 내용

그린데탕트란 관련국 간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환경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은 최근 환경 및 보건 부문의 전지구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그린데탕트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한반도 정책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녹색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한반도 생태축 구축,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묘목장 조성, 산림 병해충 방제협력 등 북한 산림녹화사업 수행, 단천지역 광산 개발 및 자원개발협력 특구 지정 등을 목표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남북관계 상황 진전을 감안하여 녹색경제협력을 도모하고, 남북간 농업협력,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등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고자 ‘남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의 한반도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후보 시절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서 비핵화 전

이라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도적 지원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 북한의 재난 대응 및 지속가능 경제발전 모색 현황

북한 당국은 자연재난과 감염병 및 환경 분야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피해와 경제발전에 주는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30년간(1991~2020년)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272건이며, 이 가운데 수해를 유발하는 태풍, 호우, 홍수 등이 134건으로 약 4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재난 위험 경감 기본 전략인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에 기초하여 ‘2019~2030년 국가재해위험 감소전략(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y)’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까지 도·시·군 인민위원회에서 지역재해위험감소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경보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이행 방안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심을 갖고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지속되는 자연재해를 체제나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 및 ‘국가환경보호전략(2019-2030)’ 수립, 2019년 ‘2030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계획(INDC)’의 UN기후변화협약 제출 등을 통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화력·수력 중심의 에너지공급 정책에서 탈피하고자 재생·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강조하는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SDGs 이행 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용량을 확충 하고 천연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SDGs 목표7.2). 그밖에도 에너지·탄소배출 저감형 건축공법 도입, ‘재자원화’ 정책 강조, 지속가능 관광 정책 추진 등 지속가능발전 모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남북 그린데탕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수요와 남한 및 국제사회의 협력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한반도 내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 범위와 방법을 고민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되 북한의 호응과 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여건이 조성될 경우 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해 대응 인프라를 지원하고 협력 기반을 확충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기·기후변화 관련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간 초국경 질병 예방 및 방역, 재난재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홍수, 가뭄, 태풍 등 남북간 재난 예측 및 경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접경지역 자연재해 관련 공동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북한의 호응과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질 현황 분석 및 미세먼지 측정 및 예측·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기술 협력 등 단계적으로 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할 수 있다.

산림·농업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불방지 공동대응,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선충·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통해 접경지역 병해충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해야 한다. 평양 순안양묘장, 개풍 양묘장, 금강산 양묘장 등 남북간 협력 경험이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양묘장 현대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재 상황과 북한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자원순환형 농축산 현대화 사업 및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을 위한 정보 교류와 관리 및 운영기술 관련 협력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를 통한 기존 협력 추진 경험을 보유한 금강산 내 영농장, 양돈장, 양묘장 등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비핵화 상황 진전을 고려하여 「남북 신재생에너지 교류센터(가칭)」의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시대화와 관련하여 DMZ의 산림복원 방안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남북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한편, DMZ 내 관광 및 문화 자원에 대한 공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악산~강원생태평화~연천임진강~금강산 등 남북 간 개발 공감대가 있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안정적 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남북 공동 협력 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1. 개요

-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분야별 국정목표 6개와 이와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제시
- 통일·외교·국방정책 추진의 목표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정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18번째 약속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를 제시함
- 여기에는 국정과제 93번 북한 비핵화 추진, 94번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95번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가 세부 추진 과제로 포함됨

### <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전략 >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④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⑤ 핵심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⑥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⑦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⑧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⑩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⑪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⑬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⑭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⑮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⑯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⑰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⑱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⑲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⑳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 본 연구에서는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국정과제 94번에 포함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살피고자 함

## 2.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의 주요 내용

○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은 최근 환경 및 보건 부문의 전지구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그린데탕트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보임**

- **그린데탕트** :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자원개발로 초래된 관련 당사국 간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여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sup>1)</sup>
- **이명박 정부의 녹색한반도 정책** : 녹색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실천
  - 한반도 생태축 구축,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묘목장 조성, 산림 병해충 방제협력 등 북한 산림녹화사업 수행, 단천지역 광산 개발 및 자원 개발협력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 :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추진
  - 남북관계 상황진전을 감안하여 녹색경제협력을 도모하고, 남북간 농업협력,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등을 목표로 함
- 한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0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도 DMZ의 생태·평화적 개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sup>2)</sup>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DMZ 환경·관광 벨트 조성 내에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 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 : 정치적 색채가 옅은 환경, 감염병 등 신(新)안보 관련 이슈 협력을 기제삼아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의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전략

1) 주장민 외,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13-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p. 12.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p. 131.

-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인도적 지원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sup>3)</sup>
- 특히,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남북한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향후 남북 양자 간 혹은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평가
- 남북한 모두 파리기후협약의 당사자로서<sup>4)</sup>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후 관련 목표를 이행

< 윤석열 정부의 그린 데탕트 정책 비교 >

구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초	(2번) 활기찬 시장경제	(4번) 평화통일 기반 구축	(5번)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 전략	(7번)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2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18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국정 과제	(35번) 녹색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25번)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94번)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세부 내용	한반도 생태축 구축 DMZ 생태계 조사 실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묘목장 조성, 산림 병해충 방제협력 등 북한 산림녹화사업 수행, 단천지역 광산 개발 및 자원개발협력 특구 지정 등 북한 광산개발 지역 및 광종 확대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녹색경제협력 도모, 남북간 농업협력,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b>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b>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도모

자료: 국무총리실, 『이명박 정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2008.10.22; 관계부처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5.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자료 참고 저자 작성.

3)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서울: 국민의힘, 2022), p. 192.

4) 남한과 북한은 2016년 4월 22일 같은날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하였음.

### 3. 북한의 재난 대응 및 지속가능 경제발전 모색 현황

#### ○ 북한 당국은 자연재난과 감염병 및 환경 분야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피해와 경제발전에 주는 위협에 우려를 표명

- 지난 30년간(1991~2020년)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272건이며, 이 가운데 수해를 유발하는 태풍, 호우, 홍수 등이 134건으로 약 49.3%를 차지<sup>5)</sup>

※ 북한은 자발적국별리뷰(이하 VNR, 2021)<sup>6)</sup>을 통해 목표 13(기후변화 그리고 그 영향과의 투쟁)에서 홍수, 가뭄, 태풍, 흑서 등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민들의 생활, 건강, 경제발전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 북한은 2014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재난관리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의 기본 개념을 수용한 「재난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sup>7)</sup>

· 동법 제2조에서 재해의 정의를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 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 농경지 침수, 산사태, 건물, 시설물의 붕괴, 전력·교통운수·통신·상하수도망 체계의 마비, 환경 오염, 전염병 전파 같은 각종 피해”로 규정<sup>8)</sup>

- 북한은 국제사회의 재난 위험 경감 기본 전략인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sup>9)</sup>에 기초하여 2019~2030년 국가재해 위험 감소전략(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y)을 수립

· 국가재해위험 감소전략(2019-2030)은 “국가의 통일적 지휘 밑에 재해 위험을 미리 막고 재해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여 사회경제 발전을 담보하며 생명·재산과 재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세부 이행 방안으로 2020년까지 도·시·군 인민위원회에서 지역재해위험감소계획을 수립, 자연재해경보체계 구축 등이 있음

5) 강택구 외,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KEI 사업보고서 2021-09-03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2021), pp. 8-9.

6)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7) 북한은 방지, 구조, 복구라는 용어를 통해 재난관리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방지는 예방, 대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구조는 대응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 국제적인 재난 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북한의 법제소식-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법제소식』 2020년 8월호, pp. 33~34.

8) 남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년 제정)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이를 총괄하여 규정.

9)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재해위험과 인명·생명·보건의 피해를 현저하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7가지 목표, 4가지 우선행동순위, 13가지 지도원리를 제시. 이경희, “기후변화와 한반도 평화,” 『평화담론』, 제주평화연구원, 2021.7. p. 5

○ 북한 당국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 중

- (환경보호 인식 증대) 김정은 정권은 지속되는 자연재해를 체제나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쏟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은 ‘국가환경보호전략(2019-2030)’을 수립, 2019년 ‘2030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계획(INDC)’의 UN기후변화협약 제출 등을 통해 산업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계획(INDC)에 따르면, 북한은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CO<sub>2e</sub>) 2.1억 톤 대비 52.4%(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포함) 감축 계획을 갖고 있음 (자체 감축 16.4% + 국제사회 협력 조건부 36%).
  - 특히, 산업용·가정용 폐수 수거·처리 시스템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 부문의 용수사용량 저감 및 폐수 재활용 방안에도 관심 증가
- (산림 복구 및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숲 관리 강화를 통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관리를 도모
  - 북한은 2015년부터 산림복구 10개년 계획을 추진, 홍수 및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
  - 숲 파괴 방지와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농촌 및 산악 지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량,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또한, 2020년부터 생태 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측량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제적이고 가치가 높은 종의 도입을 통해 숲을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을 추진 중
  - 이 밖에도 북한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및 생태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가입하고, 자국 내 생태자원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 중

< 북한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 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 >

가입년도	국제협약
1994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03	■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2017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2018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EAAFP: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2018	■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약칭 랍사르 협약)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 (해양·수산 자원 보호 및 측정 시스템 구축) 통합적인 해안 관리의 능력 배양을 통한 자원 보호와 창출, 재난 조기 경보 체제 수립 등을 과제로 인식
  - 최근 북한 당국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해양생태계 보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관측·평가·측정·시스템의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음
  - 해안과 영해의 최소 10%를 보호구역화하고, 폐수 방류와 물 환경 관련 기준의 업데이트, 오염방지를 위한 계획 및 관리 방법과 정화시설의 도입 등을 과제로 인식
  - 한편, 해안 지역 부두와 방파제의 정비를 통한 재난 위험 최소화, 농작물과 (어린)가축을 위한 방풍림 조성에도 관심
  
- (재생·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 불안정한 화력·수력 중심의 에너지공급 정책에서 탈피해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을 강조
  - 북한은 석탄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의존한 자력재생 정책과 열악한 송배전망 인프라로 인해 전력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3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2044년까지 총 30년 간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500만KW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SDGs 이행 계획에서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용량을 확충하고 천연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SDGs 목표7.2)
    - ※ 북한의 VNR(2021)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소비 최종단계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016년 12.1%에서 2020년 10.8%로 소폭 감소했다고 밝힘.
  
- (선진 건축공법 도입) 에너지·탄소배출 저감형 건축 및 인공지능 건축 기술 등 친환경·스마트 공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북한 당국은 VNR에서 녹색성장정책과 관련해 건식 건축법(dry building method)과 ‘제로(0) 에너지·탄소 건축’ 및 ‘지능 건축’ 기술의 도입 등을 언급
  - 위의 기술들은 북한 당국 스스로도 건설 부문의 세계적 추세로 선전하면서 설계, 시공, 관리 등에서 공기 단축,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건물 관리의 효율화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친환경 녹색건축 생산 증대, 산업생산에서 발생한 폐기·폐설물의 건축 재활용화 등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

- (재자원화 정책) 북한에서도 물자부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재자원화’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북한은 VNR을 통해 자국의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관련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
  - 북한의 ‘순환경제’, 재활용 정책은 ‘재자원화 정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sup>10)</sup> 이는 단순히 오물을 회수·이용하는 사업이 아닌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한편, SDGs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환경보호 기준에 맞게 도시·농촌 지역의 생활오수와 산업폐수의 수거·처리 시스템 구축 목표를 제시
  
-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준비
  - 최근 북한 당국은 관광지 개발 사업이 활발히 펼쳐으나, 지역 간 불균형이나 관광산업의 잠재력 미발휘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
    - ※ 북한의 VNR(2021)에 따르면 전체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0.16%에서 2018년 0.23%까지 증가했으나, 2020년 0.0063%로 급감했다고 밝힘.
  - 이에 지역산업과 기업의 고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준비 중
  - 한편, 금강산의 풍부한 생태관광자원과 등을 소개하며 금강산 생태관광의 추진을 장려하고 대외선전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를 적극 홍보<sup>11)</sup>
  - 특히 대기환경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호흡관광’ 등 독특한 관광형태를 소개하며 금강산 물, 대기자원의 보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힘

10) 북한의 재자원화 정책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건설, 경영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폐기물, 폐설물과 생활과정에서 나오는 오물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새로운 원료, 연료, 자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의미함; 《로동신문》(2020. 2. 14).

11) ‘금강산국제여행사’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금강산은 생태관광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홍보.

#### 4.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 북한의 수요와 남한 및 국제사회의 협력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 추구)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남북교류협력 모색
  - ‘지속가능발전’ 어젠다가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에도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 (한반도 동반 성장 모색) 남북교류협력의 효과가 어느 일방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
  - 남북한의 자본과 기술, 노동력 결합을 통해 상호보완적, 호혜적 교류협력을 추구하고, 협력 범위와 방법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필요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은 실시
  - 여건 조성시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비핵화 진전 상황 따라 재해 대응 인프라 지원 및 협력 기반 확충

##### 1) 대기·기후변화 관련 환경협력 추진

○ 남북 간 초국경 질병 예방 및 방역, 재난재해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말라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초국경 질병 예방 및 방역 협력 추진 필요
  - 전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 등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 추진
  - 공동방역 등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적 교류 및 기술 교류 추진

- 홍수, 가뭄, 태풍 등 남북간 재난 예측 및 경보 관련 데이터 공유 및 접경지역 자연재해 관련 공동 실태조사 등을 추진
- 남북 기상정보교환 및 기상 인력·기술 교류 추진, 기상설비 현대화 관련 협력은 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
  - ※ 북한의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대 기상정보교류소'에서는 휴대전화용 기상정보 프로그램인 '날씨 3.0'과 '농업기상 1.5', '대중기상', '해양기상' 등을 제공. 기상수문국은 미세먼지 상태, 대기질 상태, 기온변화 상태, 대기습도 등 다양한 기상정보 제공(《조선의 오늘》, 2021.2.18.)
- 북한의 호응도와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질 현황 분석 및 미세먼지 측정 및 예측, 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인프라 구축, 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 관련 기술 협력 등 단계적 협력 확대 가능
  - ※ 북한은 VNR(2021)을 통해 목표 3(모든 인민의 건강 보장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가정 및 주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PM2.5(초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다만, PM 측정과 청정연료 및 연소기술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 2) 산림·농업 분야 협력 강화

###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불방지 공동대응,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 협력 강화

- 재선충·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의 병해충 피해 확산을 차단,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할 필요
-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와 공동 방제 작업 실시, 방제·방역 관련 남북 전문가 기술 교류 등을 추진
- 산불방지 공동 대응, 사방사업 등 한반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산림과학기술 관련 남북 공동 토론회 등 전문가 교류 기회 확대
  - ※ 2015년 7월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위원회가 현대아산을 통해 금강산 병해충 조사 요청. 고성군 고성읍 일대 공동 조사 실시 결과 잣나무잎응애 피해 확인. 통일부, 산림청, 강원도, 현대아산 등이 참여하여 잣나무잎응애 관련 현장 교육과 방제 동시 진행.

- 평양 순안양묘장, 개풍 양묘장, 금강산 양묘장 등 남북간 협력 경험이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양묘장 현대화 사업 관련 영농장비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력장비 지원·설치, 전문가 운영·유지관리 교육 추진
  - ※ 2019년 11월 ‘개풍양묘장 현대화 사업’ 관련 양묘온실, 트랙터, 태양광발전기 등 제재 해당 품목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2020년 5월에도 온실 설치, 파종, 관개, 묘목 도구 및 기계 등 온실농사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획득한 바 있음.

○ 자원순환형 농축산 현대화 사업 및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을 위한 정보 교류, 관리 및 운영기술 관련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자원순환형 농축산 현대화사업 및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단계적 협력 추진
  - 민간단체를 통한 기존 협력 추진 경험을 보유한 금강산 내 영농장(금천리, 온정리, 삼일포 등), 양돈장(금천리, 삼일포, 성북리 등), 양묘장 등에서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
    - ※ 북한은 2021년 12월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 수립 후 1년의 성과를 진단하면서 ‘10개년 농촌발전전략’을 제시. 현존 축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대규모 남세 온실농장을 건설하는 한편, 농업과학연구기지 첨단화 등을 목표로 삼음.
- 비핵화 상황 진전을 고려하여 「남북 신재생에너지 교류센터(가칭)」 설립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남북이 지속적으로 기술, 인력 등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 권영세 통일부장관 역시 "국제사회 공감대만 이뤄낼 수 있다면 상당 수준의 인프라 사업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 18조에서 규정한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동인프라사업'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제시(2022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6.24)

3)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 DMZ의 산림복원 방안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남북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한편, DMZ 내 관광 및 문화 자원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협력을 추진
  - DMZ 역사·문화·생태·관광 관련 남북 전문가 교류 및 공동 현장조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움과 접경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 설악산~강원생태평화~연천임진강~금강산 등 남북 간 개발 공감대가 있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
  - 생태관광 시범사업 대상지를 지정하고, 이러한 협력 경험을 토대로 남북 공동의 DMZ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지정 추진을 위한 남북 간 논의를 시도할 필요<sup>12)</sup>
    - ※ 2018년 제30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에서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으로 지정.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1982년 지정)과 강원생태평화(2019년 지정)·연천임진강(2019년 지정) 생물권보전지역과 북한의 금강산 생물권보전지역을 연계할 필요.

○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남북 공동 협력 기구 구축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바 있는 '접경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
  - 과거 동서독은 1973년 접경위원회를 설치해 공유하천 보호 및 수자원 분야 협력을 비롯해 주민들의 왕래를 위한 교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 남북한도 독일의 협력사례를 토대로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모색
  - 이와 함께, 남북한이 공조하여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 내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대시켜나갈 필요

12)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은 2022년 현재 전 세계 22개가 지정되어 있음. <<https://en.unesco.org/biosphere/wnbr>> (검색일: 2022.6.9.); 2018년 국내 '순천'과 북한 '금강산'이 동시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국제조정이사회 이사국들은 유네스코를 통한 남북 협력 확대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 UNESCO, 30th MAB ICC Final Report.